

외벽 5·18 탄흔 정밀 감정...전시 콘텐츠·건축 설계 용역 발주

본 게도 오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2022년까지 콘텐츠 구축·복원공사

용역·건축 필요 예산 293억원 소요

공사 진행중에도 자료수집·제보접수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했다. 옛 전남경찰청 본관 외벽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으로 추정되는 '탄흔'에 대한 감정도 조만간 실시돼, 복원 사업이 본격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옛 전남경찰청 본관 뒤편 등에서 탄흔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팀(이하 전담팀)에 따르면, 전담팀은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전남도경찰국)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관 내외부와 연결 통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로 했다. 도청 복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상징성, 정신을 계승하고 지향하는 가치성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전남경찰청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 추정 흔적 약 100여 개에 대해서도 공사 추진 시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는 복안이다. 총탄 추정 흔적은 주로 도경찰청 본관 출입구 쪽에 많았으며 앞뒤 등 여러 부분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탄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은 항쟁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담팀은 실제 탄흔 유무를 확

인하는 기초조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시 콘텐츠 구축 기본 계획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 복원 건축 설계 용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시 콘텐츠 구축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며 복원공사는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용역·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293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전시 콘텐츠 및 공간구성 기본 방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공간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공간 ▲민주인권·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소통·상생하는 공간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에도 자료 수집, 제보 접수, 현장 감증을 병행한다. 현재 80년 5월 당시 자료 부족으로 공간을 구현할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담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당시 공간을 구현하되, 자료 부족으로 재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료 확보 후 검증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전담팀 조직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팀은 문체부 3명(4급팀장·5급·6급 이하), 광주시 2명(5급·6급), 아시아문화원 1명, 민간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담팀 관계자는 "향후 복원된 건물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는 역사성, 상징성, 가치성이라는 기본 전제와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하다' 강호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도로 구간 확장·전라선 고속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해 달라"

호남·강원·충청 '강호축' 토론회

광주시·전남도 정부 지원 요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열린 '강호축 국회토론회'에서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확장과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각각 건의했다. 광주시 정종재 행정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

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강호축 관련 각 시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건의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와 전남 등 강호축 8개 시도 등이 공동 주최했다.

강호축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충청, 강원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공감대를 통해 2017년 10월 8개 시도·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시작했다.

광주시는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강호축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호남지역 광역교통서비스를 개선을 위한 기존 4차로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삼례나들목(IC)~광주요금소(TG) 구간의 6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정청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추진 "이달 25일 전후 추경안 확정 국회 제출"

지진 특별법·개혁입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사·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청의 등을 거쳐 4월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5조원 수준이 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아울러,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 입법과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22년 외국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개

문 대통령 참석 국가관광전략회의

전국 지자체 4곳 관광거점 육성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관광을 육성하고 관광콘텐츠와 관광산업을 혁신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23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관광산업 일자리를 올해 58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일 인천 송도에 있는 경인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을 보고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제주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광역시 한 곳을 '국제(Global) 관광도시'로 키우는 한편,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에 대해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및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는 이어, 노후했지만 잠재 경쟁력이 있는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거쳐 '체류형 여행지'로 만들고 숲·농촌·낚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 남방국가에 대상으로 '한대주간'을 운영하는 등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획도 이날 소개됐다.

특히,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DMZ는 국민들이 직접 걸어들 수 있도록 개방한다. 민통선 이북 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10길'을 조성, 올해 상반기에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GP 철거 전해물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 DMZ 평화음악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을 통해 DMZ를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